

기자의 눈으로 본 대학의 연구윤리

● ● 최혜영 | 前 한국대학신문 기자

최근 '황우석 사태'로 명명된 줄기세포 조작 사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인해 학계의 연구윤리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연구윤리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원론적인 문제를 찾자면 천편일률적으로 화려한 성과만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윤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갖춰야 할 소양이며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윤리규정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이해진 연구윤리 의식을 재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공사다망(公私多忙)한 사람들이야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져 나올 즈음, 모 대학의 한 교수는 김 전 부총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가 김 부총리를 옹호하려는 생각을 가졌다가거나 혹은 교수로서의 연구윤리가 부족해서 이 같은 말을 전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다망(多忙)해지는 교수들이 연구 실적을 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보직을 겸하거나 외부 활동에 다양하게 나서고 있는 교수들 입장을 대변한 일종의 '변명'인 셈이다.

만약 이것이 교육현장에서도 그다지 흔치 않은 목소리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병준 전 부총리와 관련해 취재하면서 들었던 대학의 목소리는 여론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교수들은 '학문적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교육부의 수장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뒤에서는 '학계에도 시대적 정서가 있는데 과거 실적을 지금 잣대에 비추어보는 것은 안 된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나간다면 도덕적으로 100% 자유로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심스러운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학계에서 도가 '가벼운' 부정행위는 알게 모르게 용인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다.

사실 '연구윤리'가 대중에게 흔한 말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 유용 등으로 구속되고 지난 2005년 말,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전 세계적인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야 '연구윤리' 문제는 우리 대학들과 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고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나섰다.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윤리' 파장은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당시 연구비 유용 등 연구 부정 사례가 적발됐던 일본은 황 전 교수 사태를 기회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발표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Ⅱ. 팔짱 끼고 있는 연구 부정 방지 대책

'황우석 사태'로 명명된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의 마무리 시점이었던 지난 3월, 필자는 각 대학들의 연구윤리 강화 움직임에 관해 취재에 들어갔다. 당시 을지의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속속 연구윤리현장을 발표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 현장은 '선언'이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데 그친 것이어서 기관 자체의 제도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른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 부정 방지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필자에게 많은 대학 관계자는 필자의 기대와 달리 이와 같이 대답했다.

"서울대학교가 연구진실성위원회 만드는 걸 일단 지켜보고 결정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당시 직접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 있었던 주요 대학은 얼마 되지 않았다. 물론 당시 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학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를 하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의외로 소극적인 태도였다. 심지어 연구비 문제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모 대학조차 "이미 기존 윤리위원회에서 해왔던 일인데 굳이 또 연구윤리를 관장할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야 있겠느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당시 서울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던 '연구진실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학들이 각 연구의 윤리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만들기도는 서울대학교가 '앞서서' 만들면 비슷하게 만들어 설치하겠다는 느긋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이었던 노정혜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례를 표본삼아 진행하겠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재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혀 전례가 없던 기구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굳이 다른 대학에서 먼저 만드는 것을 기다려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사례다. 공대 교수의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샀던 일본 도쿄대학교는 지난 3월 10일에 이미 '도쿄대학 과학연구 행동 규범 위원회'를 설립, 4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논문 고발 창구를 개설해 각 연구 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를 받아 심의에 들어가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그 성격이 같다. 커다란 사건이 터

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기관을 설치한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 설립에 한국의 황우석 사태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일본 도쿄대학교도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내 연구비 유용, 데이터 조작 등으로 곤혹을 겪었던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 과학기술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해 말 연구윤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문제뿐 아니라 황우석 박사의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변진 것도 문부과학성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결정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 한 마디로 일본은 연구윤리 문제가 터지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국가'에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다른 곳이 먼저 해주길 기다리고 있던 우리 대학들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다.

또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같은 연구윤리 기구는 기존의 윤리위원회와 궤를 같이 본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 대학의 연구처장은 인터뷰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비슷한 업무를 해왔지만 연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기존의 기구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교수의 윤리위원회는 연구 문제 외의 다른 부분까지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폭넓게 다룬다. 그러나 이 조직은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소집되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다른 기구가 먼저 문제점을 발견해야 소집이 가능한 '소극적' 기구다. 또 방대한 양의 연구 논문을 검토하고 그 속의 표절이나 불법 인용을 찾아내기까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황우석 전 교수 제자들의 논문 데이터 중복 게재 여부를 발표한 국 양 서울대학교 연

구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중복 의혹을 처음 제기한 디씨인사이드의 과학갤러리, 브릭의 누리꾼들에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 처장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됐던 9개의 논문을 다 읽고 각 논문의 데이터를 비교해 중복 여부를 밝혀내려면 적어도 2달이 걸린다는 것이다.

전문가조차 2달이 걸릴 수 있는 문제를 윤리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윤리위원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방대해져 정작 윤리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학들은 아직도 연구윤리 위반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각 대학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수들을 일부 부정한 교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를 위해서 윤리 위반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 대학교수들의 연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질적 여부를 담보할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서'로 말이다.

Ⅲ. 가이드라인, 선량한 학생들만 인생 망친다

지난 6월 7일 과총회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 한 일반인이 손을 번쩍 들고 질의를 하겠다고 나섰다. 자신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김 모씨는 대뜸 '이 지침을 믿고 내부 고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이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과학기술부)평가국장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온 가이드라인안 그대로라면 학생들만 인생 망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방안을 제보 접수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연구 부정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가 필요하다. ‘내부 제보자’는 자신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대해 이들의 제보가 있어야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최종안에서 제시된 제보자 보호 규정은 구체적 보호 방안을 명시하는 대신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 방지 등의 모든 책임을 제보 접수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며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방안을 제보 접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떠넘겨 버린 것이다. 이는 제보 접수기관이나 소속기관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A대학의 한 연구원이 교수의 연구 부정을 제보하고자 한다고 해보자. 이 연구원은 소속기관인 A대학에 제보를 해야 하며 A대학은 이 연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과연 해당 대학이 이 연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보호 조치를 해줄 수 있을까? 연구 부정을 밝혀야 하는 쉽지 않은 일에 연구원을 보호하는 책임까지 대학은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또 대학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들추

고자 하는 연구원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철질할 지는 의문스러운 일이다. 결국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제3자가, 혹은 보호가 확실한 ‘중립적’ 기구가 맡아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에서 학생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 김 모씨는 실제로 내부 고발을 했다가 부당해고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 전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내부 고발에 가담한 동료들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이후 행정재판을 통해 복직한 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이같이 ‘부실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책임자보다도 내부 고발을 한 아랫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 모씨는 심지어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신세를 망치느니 국회 청렴 위원회에 신분보호요청부터 받아놓고 고발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비단 김 모씨 뿐 아니다. 당시 지정 토론에 참여한 김환석 국민대학교 교수, 이영무 한양대학교 교수 등도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일시적 연구원으로 소속된 학생이나 연구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이 없다’며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뿐 아니라 연구지원기관과 정부의 보다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 분야의 연구윤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삼성경제연구소 임용모 연구원도 내부 고발 시스템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안정적인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중립적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립적 창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 익명으로 된 제보를 받지 않는다. 익명으로 된 제보

는 실제 문제가 있는 연구보다 사적인 이유로 투서성 제보를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측의 설명이다. 자신의 실명을 기명하고 제보를 해야만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제보를 받아 일부 연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실명을 내놓고 제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한국 학계에 얼마나 될까.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지만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수적이지만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제시된 제보자 보호 규정은 구체적 보호 방안을 명시하는 대신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 방지 등의 모든 책임을 제보 접수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며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방안을 제보 접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떠넘겨 버린 것이다.

연구실 내부의 질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연구실 간 소문도 빠른 편이다. 일부 교수는 ‘교수 말에 100% 복종시키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학생들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를 마무리 지어 교수의 지도하에 학위를 받고자 하는 연구원들의 입장에서 쉽게 지도교수의 비리를, 혹은 책임연구원의 비리를 밝힐 수 없다. 어쨌거나 실명이 있어야 한다면 언젠가는 고발자 자신의 이름이 밝혀질 수 있다는 불안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구 비리를 조사하는 사람이 똑같은 교수이고 때로는 같은 분야의 교수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 연구원들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비리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학위나 취업뿐 아니라 향후 학계에 진출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또 다시 옆 나라 일본의 예를 살펴보자. 아직까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일본 가이드라인안의 경우 논문 고발 창구의 상시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 논문 고발 창구는 문부과학성 내, 국가 지원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 내, 학회 내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들은 익명의 제보가 투서성 제보가 되리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익명 제보의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 창구의 운영에도 아쉬움이 있다. 제보 창구가 연구 실시 기관, 연구 관련 기관에 한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과학기술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상설 기구로 설치되지 않은 점은 특히 그렇다. 앞에서 말했듯 내부 고발자가 소속기관에 제보하기 곤란하다면 정부와 같이 어떤 이익에도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제3의 창구라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는 쪽 빠져 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만 설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대학에만 중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내부 고발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다칠 것이 뻔한 가이드라인을 믿고 어느 누가 연구 비리를 알리고 싶겠는가. 입을 열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조용하게 잘 흘러간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윤리만이 훼손될 뿐이다.

Ⅳ. 우리에게 가능성 옷을 입혀달라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 자부하는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필자에게 '국민들을 위해 땀 테니 국민들이 우리에게 가능성 옷을 입혀 달라'는 푸념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인 즉슨, 현재의 교육 체계나 국민들의 시선이 교수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황우석 전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연구 성과들을 빨리 내놓는 교수만이 '훌륭한 교수'고, '연구를 잘하는 교수'라고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떤 교수인들 마음놓고 정직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사업 중 국가 지정연구실(NRL)과 창의적연구사업은 상대 평가를 실시해 매 3년마다 일부 사업단을 탈락시키고 있는데 이 상대평가라는 게 큰 문제다. 어느 일정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절대평가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업단과 비교해 탈락시키는 상대평가라면 분명히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긴다.

창의적 연구사업단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한 편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우수 연구사업단이라고 내놓은 이들의 성과를 보자, '대부분이 네이처, 사이언스에 실려 우수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실제로 이들의 연구 주제 자체는 연구 분야 자체가 논문 수를 많이 내놓을 수도 없으며 더욱이 그 유명한 『네이처』, 『사이언스』, 『셀』지에 들어갈 법한 분야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구비를 타 쓰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과학기술부나 한국과학재단도 '(탈락한 이유가) 그 분들의 연구 성

과가 나빠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의 예를 들었지만 NURI나 BK21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도 마찬가지다. 일단 논문을 얼마나 내놓았는지, 얼마나 발표회를 가졌는지, 어떤 결과물인지로만 따지는 평가방법으로는 연구 성과 내뿜기에 급급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교수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100% 연구에 몰두한다고 한다면 연구 성과를 놓고도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학부, 대학원 강의에 대학원 논문지도, 학부생 생활지도는 물론 대외 관계까지 이들의 일은 주말에도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대학은 교수의 강의시수를 학기당 9~12학점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은 15~20학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강의에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적당히 전의 논문을 짜깁기하는 것이 관행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성과는 내놓아야 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좋은 성과를 잘 섞어서 보기 좋게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연구윤리 제도가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성과 위주의 문화'에 대해 정부나 대학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얼마 이상의 논문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압력이나 눈에 떨 만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내놓고 있다면 교수들의 입장에서 피치 못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교수들의 연구윤리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물론 많은 교수들이 연구윤리를 착실히

지키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교수들이 문제일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교수 개인이 우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수들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리고 보다 원론적인 문제를 찾자면 지나치게 성과를 따지는 우리의 대학 문화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각 학문의 특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천편 일률적으로 화려한 성과만을 요구하는 우리 대학과 정부, 사회에도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수들이 연구윤리를 잊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윤리는 굳이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당연한 소양이 아닌가? 한 과기부 담당자가 이야기했듯,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은 없어져야 할 것'이어야 한다. 굳이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그리고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연구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규정으로 대충 뺄질하기보다 교수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이 왜 해이해졌는지를 아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런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지금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학계에 존재하지 않을 그 날을 기대한다.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하였다.